

장세윤 지음,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2005)를 읽고

박 장 배 한성대학교 강사

일본은 한조선인에게 자기정체성을 각성하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다.¹⁾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대학 초년의 기억이 난다. 돌아가신 할머니님은 ‘왜정’을 궁핍이라는 화두로 기억하고 계셨지만, 평자는 일제 시대를 독립운동이라는 화두로 기억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역사교육의 영향일 것이다. 중등학교 시절 평자는 좀 단순한 편이었는지 역사교과서에서 받은 느낌대로 일제 강점기에는 소수의 ‘친일파’만 빼고 한조선 사람은 거의 다 음양으로 독립운동에 매진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대학에 들어와서 관련 글들을 읽어보고는 큰 당혹감과 놀라움을 느꼈다. 독립운동의 비중은 초라할 정도로 적다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 임시정부의 위상도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김산과 님 웨일즈의 『아리랑』 등을 읽어보고는 이렇게 동북아시아 전역을 누빈 독립운동의 세계도 나름대로 넓은 세계구나, 피라미드처럼 거창하지는 않지만 관동과 한국반도의 여기저기에 자리잡고 있는 고인돌처럼 고인돌형 민족운동을 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서 민족운동에 참가했는가 하는 것, 그들의 노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역사적 자분을 비축하는 사업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장세윤의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는 평자가 근래에 흥미롭게 읽은 민족운동 관련 서적이다. 저자의 지적처럼 각 논문들 사이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고 일부 내용이 겹치”는 점이 있다.²⁾ 저자는 이런 점 때문에 “거시적 시야에서 바라본 품격 높은 저작”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이 책은 “20여 년”의 연구성과를 모은 저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유용한 연구성과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전례없이 폭넓은 시야와 균형잡힌 시각과 탄탄한 실증적 접근방법(실사구시적 자세)이 돋보이는 책으로 생각되었다.

이 책의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계재확정일 : 2006년 4월 15일

- 1) ‘한조선’은 대한(한국)과 조선이라는 말이 냉전 시기에 분화되어 마치 전혀 다른 말인 것처럼 사용되지만 사실상 어감의 차이 빼고는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한국과 조선이라고 지칭된 역사공동체를 통틀어 말하는 평자의 편의적인 용어다.
- 2) “주보중과 장수전은 소좌(497쪽)에서 소좌(한국군의 소령 계급)는 ‘소위’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계급도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풍산 홍씨는 당색으로 보면 대체로 노론계열에 속하였다”(507쪽), “그의 가문은 조선후기의 당색으로 보면 대체로 소론 계열에 속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08쪽)고 하여 홍명희 가계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모호하다. 또 “이 가운데 중국 영토 밖에 모국이 있는 민족은 몽골족(몽골), 조선족(한국과 북한), 하사크족(카자흐스탄) 등 3개 민족밖에 없다.”(586쪽)고 했는데, 이 점은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다.

서설: 중국 동북지역 민족운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1부 한인들의 중국동북 망명과 민족운동의 전개

제1장 안동 출신 명망가들의 만주 망명과 독립운동

제2장 1920년대 이상촌 건설운동과 안창호

제3장 독립군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의 재검토

제4장 청산리대첩 전후 시기 일본군의 '간도학살' 만행

제2부 간도봉기와 한·중 연대 항일무장투쟁

제1장 1930년대 초 간도(연변)에서의 한인 대중봉기

제2장 1930년대 민족주의계열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제3장 중국공산당 만주조직과 한인들의 민족해방운동

제4장 만주지역 한인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식생활과 보건위생

제3부 근대민족운동의 재인식과 한국현대사

제1장 해방 직후 북한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과 편찬

제2장 남·북한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역사인식

제3장 주보중의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와 한국현대사

제4장 벽초 홍명희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제5장 일제하 고등문관 시험 출신자와 해방 후 권력 엘리트

보론: 중국 조선족 동포의 현황과 전망

이 목차는 저자의 연구가 미친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자는 독립운동 얘기가 ‘지루했던’ 이유를 이 책이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고 느꼈다. 거칠게 말해서 독립운동 얘기는 듣기에 따라서는 좁은 시각으로 거의 ‘동어반복’적인 얘기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저자가 보여준 바와 같이 민족운동 얘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이 책에서 특히 62쪽에 달하는 만주 민족운동 관련 연구사 정리는 현재 연구 상황을 한눈에 요약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돋보이는 책의 서설이다.

저자가 서설에서도 지적했지만, 한국민족운동사 연구에는 다양한 시각 사이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의외로 많은 연구의 공백이 존재한다. 저자가 지적한 몇 가지 사실을 거론해 보자.

- ① “사실 봉오동과 청산리전투 등 1920년대 초의 독립전쟁은 러시아 혁명운동세력 등 국제지원세력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를 다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44쪽)
“일본 자료는 그들의 피해를 다분히 축소했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본 측 자료를 더 충분히 수집하여 더욱 완벽하게 진상을 검증, 보완해야 할 것이다.”(142쪽)
- ②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체계적 규명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1920년대 초 일본군의 ‘간도학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167-168쪽)

- ③ “아직 미진한 여성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작업이 더욱 필요하다.…… 추후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기대된다.”(62-63쪽)
- ④ “흔히 ‘풍찬노숙’으로 표현되는 이들의 생활은 실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실상은 별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이와 관련된 자료가 별로 없고, 생존인물도 거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337-338쪽)
- ⑤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에 소위 ‘친일파’의 행태와 해방 이후 그들의 행적, 특히 역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계의 연구성과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538쪽)

‘나라마다 쫓겨난 망명자들은 자신의 인민들의 전위를 상징한다’는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339쪽),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하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만주(관동; 현재의 중국동북)로 떠났다. 그러나 현시대의 한조선인들은 그들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발굴하여 그들의 피와 땀의 흔적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연구자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아니할 수 없다.”(65쪽)

독립운동가들의 관동체험은 고난과 단련의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허은 여사는 ‘서간도 바람소리’를³⁾ 전해주었다. 그 바람소리(만주민족 신화에 나오는 바람여신 시스린의 목소리라고나 할까)는 반드시 우호적인 것이 아니었으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가져오는 바람소리로 믿었다. 저자는 “매우 험난한 조건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한조선민족과 민족해방운동 진영의 앞날을 낙관하고 있었으며, 반드시 일제가 패망할 것이라는 신념과 자부심을 갖고 독립전쟁에 임하고 있었다는 귀중한 사실을 확인”(236쪽)하였다. 관동 인근에는 햇볕보다는 바람이 더 많았나 보다. 이른바 ‘백두산 바람’(300쪽)이란 말도 있고, “1992년 한중수교 이후의 ‘한국바람’”(593쪽)도 있지만, ‘서간도의 바람소리’가 가장 선명하다.

저자는 “‘청산리전투’는 이처럼 사료에 따라 그 실상이나 전과가 매우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추후 한국과 일본, 중국 및 러시아측 자료를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종합하며, 관련 연구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연구하고 교류하는 보다 개방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156쪽)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전투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진상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각국 학계의 교류가 미흡했던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실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일본측의 연구도 일본군의 사상사 수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을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하다. 저자는 또 “국내연구자들도 이들 잡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도록 학술교류를 강화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지역 민족운동연구에 대한 주도권마저 중국(연변)이나 일본, 구미학자들에게 넘길 우려도 있다.”(73쪽)고 말하고 있다. 한국 학계의 주도적 연구는 다른 나라 학계의 연구에도 자극이 될 것이다.

3) “우리같이 쫓겨다니고 입에 풀칠이나 하고 위기를 넘긴 사람들은 지손들의 교육같은 것 생각지도 못했다. 오로지 어른들의 독립투쟁, 그것만이 직접 보고 배운 산 교육이었다. 목숨을 항상 내놓고 다녔으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깝다. 애 어른 없이 그 허허벌판 황야에 묻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 불모지에 잡초처럼 살았지.”(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우사, 1995, 177쪽)

진상 규명이 미흡한 것은 ‘간도 참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청산리대첩’의 대가로 서간도와 북간도의 한조선인 사회는 너무나 엄청난 희생(간도참변)을 치렀다. 이러한 보복공격의 크기는 일본군의 피해 규모 내지는 위협감 크기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면 그 군대는 악마의 군대일 것이다. 저자는 간도참변(경신참변)을 남경대학살의 선례로 보았다. 문제는 학살만행과 전쟁범죄에 대해 죄의식이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아우슈비츠보다 무서운 것은 단 한가지, 인류가 그것을 잊는 것이다.”(177쪽)라고 쓰여 있다면,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서 잊을 것도 없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인 듯 싶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한국독립기념관에 상대국 총리가 찾는 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듯 싶다.

또 저자가 지적했듯이, 여성민족운동사 분야의 연구가 미흡한 점도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그 여성사 부분은 이 책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 한조선 최고급의 독립운동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글 언론출판의 문제도 다루지 못하였다. 대신에 생활사 부문의 시도는 매우 인상적이다. 사실 평자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만주지역 한인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식생활과 보건위생」이라는 글이다. 저자에 의하면, 놀랍게도 “청산이 전투에 참가한 독립군 부대들은 별도의 ‘보급대’가 없었다.”(344쪽) “항일전쟁시기 식량·신발·성냥·소금 등 4가지가 가장 곤란한 문제였다. 이 중 소금부족이 가장 어려웠다.”(355-356쪽) 또 “신발은 당시 산에서 유격전을 수행하는 대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군수물자였다.”(349쪽)

생활사에 대한 관심은 저자의 보다 깊은 관심에서 나온 듯하다. 이상촌 건설 후보지를 물색하는 여행(?)을 했던 안창호의 수력전기 개발사업 구상을 언급한 것(132쪽)이나 홍명희에 대한 연구는 저자의 입장에 비추어 반드시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먼저, 홍명희는 무엇보다 생활을 중요시하였다. 그는 1948년 5월의 한 대담에서 “우리는 예술로 살기보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다.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생활을 본위로 예술을 창조하여야 하겠다. 아니 예술은 구경 우리 생활의 한 도구다. 우리는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진영을 개척하자.”고(515쪽) 주장하였다. 이보다 앞서 그는 “생활과 디렉트한 관계를 가진 문학”(1926년 1월)을 강조하였다. 또 그는 “신간회의 나갈 길은 민족운동만으로 보면 가장 원편 길이나 사회주의운동까지 겹치어 생각하면 중간 길이 될 것이다.”고(1927년 1월) 주장하였다. ‘중간 길’은 저자의 포용적 입장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동은 퇴계 학통이 강세를 보인 지역인데 흥미롭게도 안동 출신 독립유공자의 비중이 의외로 높았다. 한국지폐도안의 1000원짜리 전속모델인 퇴계 이황은 한조선인의 끈질긴 독립운동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지폐도안에는 여성모델도 없고 독립운동가도 없다. 지폐도안을 결정할 당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세력보다는 식민지 지배체제에 포섭되었던 세력들이 집권하여 권력의 정통성을 경제개발에서 찾으면서 자신들은 군부정권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수호자임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독립운동의 요소가 지폐도안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보수와 진보’, 양면을 동시에 봐야 하는 것이 안동지역사의 진면목”(81쪽)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안동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저자가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 참가자들을 분석한 것은 독립운동의 전체그림 중의 한 조각을 맞추

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용어와 개념, 그리고 국제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에 대해서도 저자는 “안창호 개인이 갖는 성격과 미주 민족운동 세력, 기독교계열 민족운동 세력과의 복합적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37쪽)고 지적하였다. 저자는 역사용어를 조사, 표준화하는 작업에 관심을 보였고, 또 실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개념 설정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① “아직까지는 기본적 사실규명이 미흡하다보니 각종 민족운동 단체들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들을 유형화하고 계열화하고 이들의 활약이 갖는 의미와 성격을 추출하여 한국근대사에서 갖는 위상을 정립하는 등 거시적 시야에서의 작업이 요청된다.”(71쪽)
- ② “이제 우리는 특정경향을 띠기 쉬운 이념의 편견에서 벗어나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각지의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취합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에 기초하여 파벌투쟁의 역사가 아닌 민족통합과 단결의 독립운동사를 복원해야 한다. 독립운동(민족해방운동)이란 사회 제모순의 척결을 위한 총체적 변혁운동의 의미와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에게 생생한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로 복원되어야 하는 것이다.”(72쪽)
- ③ “현재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진정한 이해와 상호연대, 평화공존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이제 광복 6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우리가 처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열들이 남긴 값진 교훈을 잘 음미하는 한편,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분투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길의 삶을 가야 하겠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이란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종의 사회변혁운동이자 총체적 민중운동의 과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166쪽)

여기서 저자는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인식이 삶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 즉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바른 삶의 길은 크게는 민족분단을 넘어선 길, 동아시아의 갈등을 넘어선 길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저자의 민족해방운동 개념에 입각한 거시적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저자는 “독립운동이란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종의 사회변혁운동이자 총체적 민중운동의 과정”(165쪽)이라고 규정하였다.

관내와 관동에서 전개된 한조선인들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민족해방운동을 잊지 않는 것은 침략세력에 대한 복수나 현상변화를 도모하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떤 주제든 역사와 현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감각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자는 용어와 개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자는 “남북한 역사학계가 만들어온 ‘분단지향적 담론’, 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 ‘현실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시급하다는 지적”(437쪽)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민족해방운동의 좌우노선 분화가 한국분단의 요인이라는 ‘내인론’은 타당성이 없다. 분단과정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분리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방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냉전이 해소되고 외세의 압력이 약화되었음에도 한민족 스스로가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반성이 필요

하다. 남북분단 극복과 민족 재통일의 주체는 당연히 한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328쪽) 따라서 “남·북한의 ‘분단사학’은 한민족이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달성할 경우 ‘분단사학’의 명예를 벗고, ‘통일사학’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426쪽)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1930년대 만주지역 독립군의 무장투쟁”은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정화 및 최고 결정체”라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 민족이 8·15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유력한 논거가 된다”고(263쪽) 파악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나 광복군이나 “본래의 계획대로 전투작전을 전개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동북항일연군 참가 한인들의 최후 항쟁과 대중조직의 결성은 한국사회에는 비록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들은 중국공산당과 소련이라는 국제 지원세력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조선혁명’이란 자신의 고유의 임무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때문에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상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335쪽)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으로 활동한 한인들은 만주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1940년대 전반기 중국 관내지역에서 활동한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처럼 독자적 조직체를 결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한국광복군이나 조선의용군처럼 3대 주요 해외 민족해방 운동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501쪽)

저자는 관동의 항일무장투쟁이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도 한조선의 독립이나 한·중의 국제 연대의 경험 차원에서도 귀중한 역사적 경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관동의 항일무장투쟁은 ‘남의 나라 땅에서 결방살이를 하였던 특수한 조건’ 하에서 “1930년대 전반기에 좌경화된 중국공산당 민족정책의 과오”(56쪽), “‘일제의 간첩’일지 모른다는 억울한 누명”(256쪽), “당시 운동 참가자들의 공식주의”(320쪽) 등 많은 악조건과 약점을 안고 있었다. 관동에서 ‘조선독립’을 직접 표방한 민족운동이 쉽지 않았다. 동북인민혁명군의 “문건 가운데 한국 독립(해방)이나 혁명의 지원을 직접 표방한 내용은 없었다.”(280쪽) 저자는 이런 내용들을 착실하게 검토하여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갈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관점을 비판하고 오히려 연대의 경험이 더 중요한 측면이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한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의 국제연대를 비중있게 부각시켰다. 그리고 “편협한 시각은 민족해방운동의 전체적 조망을 가로막는 편견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182쪽) 지적하였다.

저자의 지적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학계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연구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특히 관점의 문제는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북한 학계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여러 차례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① “방문권은 놀랍게도 조국광복회의 활동을 김정일과 연관지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316쪽) ② “김일성 개인에 대한 숭배와 영웅화, 지주계급에 대한 적대감을 매우 직접적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온다. 특히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극도의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아동교육인지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448쪽) ③ “북한 최고의 지성으로 상징되는 대학의 역사교재 역시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교시로 장식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450쪽) ④ “1980~1990년대 이후 논문에서 이러한 원사료를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증적 논문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띤 글로

그 성격이 전환되면서 이러한 기풍이 사라진 것이다.”(322쪽)

저자는 “원색적 용어”(411쪽)가 들어간 역사교과서, ‘상징조작’을 위해 “가공의 사실을 과장하는 논문”(305쪽), “김일성의 가계마저 과대포장되고 있는 것”(462쪽) 등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역사 학계도 큰 영향을 받았던”(405쪽) 북한학계의 ‘과잉 정치성’ 문제(376쪽)를 지적하였다. 요컨대 북한의 연구가 ‘김일성주의의 도구’(323쪽)로 기능하는 ‘주체사관’에 따른 ‘어용사학’(432쪽) 내지는 ‘실용학문’(311쪽)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파악한다. 저자는 북한의 항일무장투쟁 연구가 “일종의 ‘자기도취’적 성격이 짙다고 본다.”(449쪽)

앞의 문제점들 때문에 남한 학계에서는 “성급한 역사학의 통일논의보다는 신중하고 이성적인 ‘상대방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429쪽)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저자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제안하였다. 저자는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8은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나온 공식 간행물과는 달리 개인적 체험담을 비교적 솔직히 언급한 부분이 있어 자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고(67쪽) 지적하였다. 저자는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음미’론을 주장하였다. ① “김일성 한 개인의 회고록이기 보다는 북한 역사학·정치계와 조선로동당의 공식 입장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은 뜻을 잘 음미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회고록의 가치는 상당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엄격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468쪽) ② “필자는 이러한 비판적 관점도 필요하지만, 북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역사학의 특수성을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그 행간에 숨은 뜻을 잘 음미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미 상당수 연구자들에 의해 검토된 바와 같이 전근대와 근대 시기의 특정 주제나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남·북한 모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438쪽) 학문민주화에 힘입은 한국학계의 연구는 북한학계와도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해의 관점은 남한 한계는 물론이고 중국학계나 일본학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한에서는 1997년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음란물의 혐의로 재판과 징역을 받고 있었고, 단군릉과 동명왕릉 개건 사업은 ‘역사날조’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북한의 유례없는 단군릉과 동명왕릉 등의 개건은 중국 학계의 한조선 고대사 인식의 대대적인 전환과 관계가 깊었을 가능성이 컸다. 남한 학계에서 분단사학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그런 비판을 무차별적으로 행하다가 그후 10년이 지나서야 공동대응을 거론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냉소를 부를 여지가 없지 않다.

저자는 남한 학계나 교육계, 언론계의 문제점도 일부 거론하였다. ‘분단사학’의 영향을 안고 있는 “현재 (남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김일성 등 만주 항일빨치산 세력의 항일투쟁에 대한 정설마저 상당수 교과서에 수록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268쪽) 2005년 초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김일성의 ‘독립운동’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가 보수언론측으로부터 큰 곤욕을 치렀다. 이를 두고 강만길 위원장은 “상식이 특종으로 보도되는 언론계의 현실”이라고 개탄한 바 있다.(268쪽) 이른바 ‘친일파’와 그 계승자들의 행태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매우 단호하다. 저자는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의 모습을 두고 극심한 “일제의 한국인 분열책”(541쪽)을 지적하는 동시에 “얼빠진 인간들”(545쪽)이라고까지 서술하였다. 게다가 해방후 “시세에 영합하는 그(김영선)의 ‘유능함’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559쪽)

1927년 2월 14일 길림시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안창호는 ‘대한청년의 진로’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안창호 등의 이상촌 건설운동은 당시 운동 정세에 부응한 적절한 방침이자 “민족만년의 대계”를 성취하는 디딤돌로 평가되었다.(130~131쪽) 그러나 민족해방운동 연구결과는 현재의 편협한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족만년의 대계’와 ‘만년 재부’가 사장되어 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 학계는 ‘불멸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만년재부”(1997년 7월 8일)라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반만년의 우리나라 력사”(450쪽)를 상징하고 있었다. 아무튼 저자는 북한 학계의 김일성 세력의 항일무장투쟁만이 과대포장되어서도 곤란하지만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학계의 연구에 대한 저자의 서술 논조에는 같은 책 안에서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일제시대에 한조선과 중국은 일종의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연대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저자는 이 책 곳곳에서 한중 연대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저자의 책에는 한중 연대의 의미를 조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중국측의 연구의 시각 변화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요소가 첨가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동북변강연구공정’과 관련이 있다. 저자의 책에는 중국의 ‘동북변강연구공정’ 이전과 이후의 논조에 변화가 엿보인다. 저자는 중국학자 양소전의 “논지가 최근 바뀐 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그가 1990년대에 중화주의적 시각으로 한중관계사 연구를 주도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21-22쪽)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의 관변학자들은 1990년대 초부터 한중관계사 통사류 서적이나 동북공정 관련 학술대회를 통해 조직적이며 악의적으로 한중관계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사의 시작을 기자조선부터 서술하며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 중국의 책봉을 받은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조선의 경계는 청천강 유역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35쪽)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조선과 중국의 학계가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자는 늘 비판의 관점과 함께 이해의 관점을 동시에 제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이 책의 논지와는 관계가 없지만, 평자는 용어사용의 문제를 한번 더 제기하고 싶다. 저자는 “소위 ‘서부대개발’과 ‘서남공정’, ‘동북공정’ 등의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574쪽)고 하였다. 평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서남공정’이란 용어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근래 한국 언론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종종 ‘동북공정’, ‘서남공정’이나 ‘서북공정’ 등의 용어가 중국의 ‘동북변강연구공정’ 관련 내용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중에 이른바 ‘서남공정’이나 ‘서북공정’ 등의 용어는 취합개념으로서 사용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정’이란 말에는 비중이 다른 정책이 포함되고 또 조사사업과 정책사업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중국도 개발주의적 ‘토건국가’의 면모를 충실하게 보여주었다. ‘부국강병’을 위한 ‘공정’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이 ‘토건국가’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 통시대의 티베트와 같이 ‘개발’에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일종의 생태주의 국가와는 달리, 현대 중국은 토건국가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국가를 구성했다. 손문은 1910년대에 ‘건국방략’을 통해 건설계획을 전방위적으로 구상해본 적이 있었다.

민국시대는 할거와 침탈 등으로 손문의 토건국가, 부국강병의 꿈은 사실상 유보되었지만, 1949년

신중국이 수립되고 나서 토건국가 건설사업은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신중국의 ‘부국강병 정책’을 상징하는 중국식 5개년 계획은 합리적이고 융통성있게 구성될 수 있었지만 표시가 안 나는 꾸준한 사업이었고 대중들에게 업적을 과시하고 대중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대개 대규모 정치운동을 몰고 다녔다. 1958년의 대약진운동, 1966년의 문화대혁명운동, 1970년대 이래의 4개 현대화운동-개혁개방정책, 1990년대 중반 이래의 ‘중화문명부흥운동’ 등은 그 사례였다. 1990년대 이래 신중국에서는 내외의 주목을 끈 ‘삼협공정’(1992), ‘하상주단대공정’(1996), ‘서부대개발전략’(1999), ‘동북변강공정’(2002)과 ‘동북공업진흥전략’(2003), ‘중화문명탑원공정’(2003) 등을 진행했거나 해오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평자의 ‘중화문명 부흥운동’이란 용어는 물론 편의적인 이름으로, 그것은 1990년대 초반에는 소련의 해체와 냉전체제의 붕괴 등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성격의 내부 통합 대책의 의미가 강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격이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신중국에서 5개년 계획은 그 자체가 많은 프로젝트(공정)를 몰고 다녔지만, 최근 국책사업에는 상업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는 듯하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작 한국언론에서 얘기하는 식의 ‘서북공정’이나 ‘서남공정’과 같은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국현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서남공정’을 공식적으로 제창한 것이 아니라 ‘티베트 정책’(티베트 통합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중국의 국가권력이 각종 ‘공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만큼 그렇게 앞뒤 딱딱 맞게 합리적이고 ‘인해전술적(?)’인 것일까. 중국의 국가권력이 반드시 그렇게 치밀하고 빈틈없는 권력체라고 볼 수는 없다. 허술한 구석도 있고 전능한 존재와는 거리가 멀고, 또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것 못지 않게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질서’를 선호한다. 공포의 중국상(중국위협론)의 중국보다 실제의 중국을 치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동북변강연구공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국의 정책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국가활동과 집중적인 활동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는 1996년 5개년 계획과 함께 ‘장기계획(遠景)’과 ‘7개 경제구역’ 개념(① 장강 삼각주 및 沿江 지구, ② 環渤海지구, ③ 동남연해지구, ④ 서남과 화남 일부 省區, ⑤ 동북지구, ⑥ 중부5성지구, ⑦ 서북지구)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구상의 의미가 있는 계획구상이다. ‘서남공정’이나 ‘서북공정’과 같은 기계적(?) 용어를 만들어 쓰는 것보다는 실제 계획이 작동되는 실제 현실을 더욱 충실히 분석하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중국에는 비중이 큰 민족-변강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변강정책, 민족정책과 함께 종교정책, 경제정책, 교통(도로철로)정책, 학술-교육정책 등의 중층적, 복합적 정책과 수단이 적용되고 있다. ‘서남공정’이라는 취합개념보다는 5개년 계획에 대한 이해와 함께 ‘티베트 정책’과 ‘서대개발전략’, 7개 경제구역 발전계획 등의 실제 구축된 정책과 전략을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원경’개념과 ‘다원일체’ 개념은 최근의 중화문명론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 비현실적인 ‘천하정복’보다 ‘천하중심국가’가 된다는 원대한 방략(기본적으로 부국강병 정책)에 가까울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일원론이 모색되는 것은 국내적 맥락과 국제적 맥락 모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문명사적으로는 대문구 문화의 발굴, 삼성퇴 문화와 홍산문화 발굴 등의 충격은 일원론적 인식에서는 심대한 것이었을 것이다. 불교의 도입이 중국의 일원적 우주관에 충격을 주어 그것을 수습하는데 수백년이 걸렸다면, 새로운 신종 일원론의 조립은 유례없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역사전쟁이 아니라 그저 역사상 늘상 있었던 ‘계승경쟁’일 뿐이다. 중국의 경우 동아시아 공동의 유산을 놓고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다보니 특징과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다극체제의 존재는 다원론을 부각시킬 여지가 있었다.

동북변강연구공정은 중국 국가의 성격을 통해 그 연구공정의 의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작업이다. ‘동북변강연구공정’은 조사작업이다. 조사는 중국의 국가경영원칙이다.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도 했지만, ‘조사 없이 발언권 없다’는 말도 했다.(1930년, 「본분주의에 반대한다」). 중국의 경영이념에는 상무정신과 조사정신(실사구시)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신중국 권력은 조사 권력 내지 실사구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폼나는(?) 걸 좋아하는 이들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중국위협론’의 근거로 들이대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의 일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조사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내부 정책과 국제질서는 물론 중국의 역대 군사외교 전략의 유산과 관계가 없을 수 없다. 중화제국은 간접지배론과 직접지배론이 교차하는 역사를 보여주었다. 대등한 외교도 그렇게 일종의 간접지배론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황제 개념의 특성이었다. 진시황은 “인적이 미치는 곳은 복속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없다.(人迹所至, 無不臣者)”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황제개념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힘의 한계와 비용의 제약으로 중화제국은 이념적으로 전 세계를 관할하지만 실질적인 지배를 시도하지는 않는 쪽이었다(以外而不內). 물론 주도권과 명분을 독점하였다[其慕義而貢獻, 則接之以禮讓, 羈靡不絕, 使曲在彼, 蓋聖王制御蠻夷之常道也.](漢書/列傳94下/匈奴傳64下) 그리고 중화제국은 일종의 문명중심이 됨으로써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물론 ‘이이제이(以夷制夷)’ 문법에 주목해야 한다. 임칙서(林則徐)의 상소문에 “이이제이”란 말이 나오니까 상당히 근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이제이’ 문법을 체계화한 이들은 제자백가들로 보인다. 공자는 “수기이경(修己以敬)” 또는 “위정이덕(爲政以德)” 혹은 “以德讓爲國” 등을 말하였고, 증자는 “以文會友, 以友輔仁”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것은 국제관계에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보여줄 것이다. 중국의 주변국 방략은 “이만이공만이(以蠻夷攻蠻夷)”(漢書;晁錯傳)와 ‘입술이 사라지면 입술이 시리다(脣亡齒寒)’(韓非子)는 것, 즉 일종의 ‘以脣補齒’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 무조건 따라하는 이이제이론자의 단순한 ‘흉내’ 기법이나 ‘자기 창으로 자기 방패를 찌르게 하는’ 방법(以予之矛, 攻予之盾)을[韓非子/難一] 등의 비판적, 대결적 방법도 때로는 필요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한조선의 입장은 남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이해의 관점과 ‘화이부동(和而不同)’ 연대전략을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가의 임무가 거시적 시각을 확보하여 역사연구와 함께 현실분석까지 감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역사연구의 지평을 확대해 주었다.